

2018 서울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8.3.24. 시행)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행정학 95% 적중)**
이번 서울시7급 행정학은 7급답게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는 체감난이도가 높아 60~70점대를 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출문제의 비중이 15%(3문항)에 그쳤으며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엽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선행정학 기본심화이론이나 문풀강의에서 강조한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어** 선행정학 커리를 충실히 따른 수험생들이라면 문14의 “행정능력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풀 수 있어서 95점까지도 무난히 고득점이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예컨대 문3 김영란법의 경우 “대가성이나 명목에 관계없이”라고 강조한 부분, 문4의 Lasswell의 정책지향의 경우 정책과정에서 “필요한(for)”과 “관한(on)”에 관한 부분, 문6의 경쟁적 가치 접근법의 구체적인 내용, 문9의 주민투표의 “발의는 단체장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부분, 문11의 의제설정의 제모형(7급기본서 p.204), 문12의 Crenson의 문제특성론에 중요한 “대기오염문제가 왜 정치화가 안되는지”에 대해 강조한 부분, 문13의 신성과주의예산은 회계제도가 예산의 형식까지 변화시키지는 않으므로 개혁의 폭과 범위는 구성과주의보다 오히려 “좁고 단순하다”고 강조한 부분, 문20의 경우 이행명령에 대한 소송제기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해야한다고 강조한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이번 서울7급 행정학은 한마디로 역시 7급은 9급과 달리 폭과 깊이를 조금은 달리해야 한다는 점과 단편적인 암기보다는 이해위주로 정곡을 찌러주는 강의와 교재로 공부해야 고득점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준 출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정학은 공부범위를 그리 넓히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출제가능한 급소를 찌르는 족집게 강의**입니다. 선행정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해가 쉽고 재밌고 명쾌합니다. 아래 정답과 해설은 카스파에서 잠정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김중규 -

01. 행정이념으로서의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롤스(Rawls)의 최소최대 원칙(minimax principle)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의 편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의미한다.
- ②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과 최소한의 평등 확보 측면에서 욕구이론은 수평적 형평에 대한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다.
- ③ 실적의 차이에 따른 차등적 배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실적이론은 수직적 형평의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④ 행정예의 참여와 가치지향을 강조하는 신행정론에서 주목한 바 있다.

[답] ① 롤스(Rawls)는 「정의론」에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의 편익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최대 최소 원칙(Maximin principle)을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 ②③ [O]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에 대해서는 공평의 대상을 “기회”로 볼 것이냐, “결과”로 볼 것이냐에 따라 표현이 반대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회”로 보아 실적이론은 수평적 공평, 평등(또는 욕구)이론은 수직적

공평으로 보지만 반대로 “결과”로 보아 뒤집어 표현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의 다양한 표현

공평의 대상	“기회”	“결과”
이론		
실적이론	수평적 공평 (기회를 같게)	수직적 공평 (결과가 달라지게)
욕구이론 (또는 평등이론)	수직적 공평 (기회를 다르게)	수평적 공평 (결과가 같아지게)

☞ 2018 7급 선행정학 p.87

02. 로즈(Rhodes)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공동체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네트워크이다.
- ② 이슈네트워크의 행위자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이슈의 성격에 따라 주요 행위자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 ③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 형성은 동기는 소유 자원의 상호의존성에 기인한다.
- ④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정책산출은 처음 의도한 정책내용과 유사하며, 정책산출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다.

[답] ④ 정책네트워크 모형에서의 정책산출 예측은 구체적인 모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이슈네트워크는 정책산출 예측이 곤란한 반면, 정책공동체는 비교적 예측이 용이) 전반적으로 볼 때 정책산출은 각종 이해관계자나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에 의하여 처음 의도했던 정책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책산출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정책공동체의 비교

	철의 삼각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행위자	관료+이익집단+의 회상임위원회	광범위한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된 참여 (관료+전문가)
폐쇄성	폐쇄적	개방적	비교적 폐쇄적
안정성	안정적	불안정 (유동적, 일시적)	비교적 안정적 (지속적)
행위자 간관계	동맹관계	경쟁적, 갈등적 (negative-sum game : 영합게임)	의존적, 협력적 (positive-sum game : 정합게임)
정책	분야별 정책자배	정책산출 예측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 가능

☞ 2018 7급 선행정학 p.212

0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
- ②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은 언론사의 임직원은 물론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④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까지 가능하고, 축의금

과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답] 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O] 김영란법에 의한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의 범주에는 순수정부(공무원) + 공직유관단체(공기업 등)의 임직원 + 언론사 임직원 + 학교법인의 교직원과 그 배우자가 모두 포함된다.

④ [O]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까지이지만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음식물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까지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 김영란법상 금품수수 허용범위

	음식물비	선물	경조사비
원칙	3만원	5만원	5만원
예외		농축수산물은 10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

☞ 2018 7급 선행정학 p.574

O4. 라스웰(Lasswell)의 '정책지향' (policy orientation)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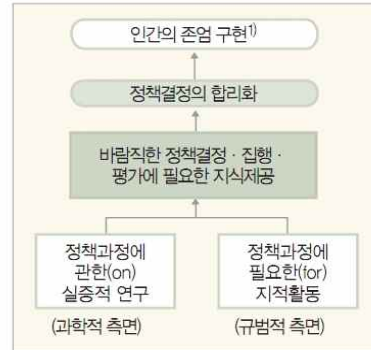
- ① 정책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
- ②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은 규범적, 처방적 지식을 의미한다.
- ③ 정책적 의사결정을 사회적 과정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 ④ 다양한 연구방법의 사용을 장려한다.

[답] ②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은 규범적·처방적 지식이 아니라 현실적·실증적 지식을 의미한다. 정책과학은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하여 정책과정에 "필요한(for)" 지식과 정책과정에 "관한(on)" 지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Lasswell은 정책과학의 특성으로 문제지향성, 맥락지향성, 연합학문성 및 규범지향성을 제시하였다(암-문맥연구)

- ☑ ① [O] 문제지향성
② [O] 규범지향성
③ [O] 맥락지향성
④ [O] 연합학문성

● 정책학의 연구목적(H.D.Lasswell)

2 정책학의 연구목적(H.D.Lasswell)



1) H.D.Lasswell은 2차 대전 종로시 미국 Truman 대통령의 일본 원폭투하 정책을 비판하며 인본주의 정책학을 주장

☞ 2018 7급 선행정학 p.188

O5.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들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공익은 공유된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이해된다.
- ③ 정부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 데 있어 방향잡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 ④ 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이익 등 다양한 책임성 기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답]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방향잡기와 노점기의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봉사하는 서비스를 강조한다. 시장의 힘을 활용하여 방향잡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점은 신공공관리론의 관점이다.

● 신공공서비스의 특징

- ①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 "조종기보다 시민에게 봉사"
- ②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 ③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 ④ 시민에 대한 봉사 -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한다."
- ⑤ 책임의 다양성 -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 ⑥ 인간존중 -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 ⑦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의 비교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합리성	개괄적 합리성	기술적·경제적 합리성	전략적 합리성
관료 역할	행정인	기업가	조정자·봉사자
공익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	개인들의 총이익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
대상	고객·유권자	고객	시민
정부	노점기	방향잡기	봉사 서비스

역할			
조직	기존 정부기구	민간·비영리기구	연합체 구축
책임	계층제적	시장지향적	다면성·복잡성
구조	관료적 조직	분권적 조직	협동적 구조

☞ 2018 7급 선행정학 p.181

06. 조직효과성의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s Model)에서 조직의 성장 및 자원획득의 목표를 강조하는 관점은?

- ① 개방체제 관점
- ② 내부과정 관점
- ③ 인간관계 관점
- ④ 합리적 목표 관점

[답] ① 조직의 성장 및 자원획득의 목표를 강조하는 관점은 Quinn & Rohrbaugh(1983)의 경쟁적 가치 접근법 중 개방체제 모형에 해당한다.

● 경쟁적 가치 접근법

가치	조직(외부)	인간(내부)
통제	〈합리목표모형〉 - 합리문화 • 목적: 생산성, 능률성 • 수단: 기획, 목표설정, 합리적 통제	〈내부과정모형〉 - 위계문화 • 목적: 안정성, 통제와 감독 • 수단: 정보관리, 의사소통
유연성	〈개방체제모형〉 - 발전문화 • 목적: 성장, 자원획득, 경쟁 적응 • 수단: 유연성, 용이함	〈인간관계모형〉 - 집단문화 • 목적: 인적자원 발달, 팀워크, 능력개발, 구성원 만족 • 수단: 응집력, 사기

☞ 2018 7급 선행정학 p.99

07.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신설하였다.
- ㄴ.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조직은 외청으로 독립시켜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었다.
- ㄷ.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두었다.
- ㄹ. 일관성 있는 수자원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물 관리 일원화를 담당하게 하였다.
- ㅁ.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답] ② 옳게 연결된 것은 ㄱ, ㄷ, ㅁ이다.

- ☑ ㄱ [O]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신설하였다.
 ㄴ [X]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은 해안수산부 외청으로 독립시켰다.
 ㄷ [O]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두었다.
 ㄹ [X] 수자원 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정부 초반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여야 및 부처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현재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ㅁ [O]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했다.

●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

- 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 ② 국민안전처 폐지
- ③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
- ④ 해양경찰청과 소방청 분리·독립 :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은 해안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독립
- ⑤ 국가보훈처장 장관급으로 격상
- ⑥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

☞ 2018 7급 선행정학 p.409

08. 주민참여제도 중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 ① 주민소환제
- ② 조례제정개폐청구제
- ③ 주민투표제
- ④ 주민소송제

[답] ②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감사청구제도와 함께 1999년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 ☑ ① [X] 2007년
 ③ [X] 2004년
 ④ [X] 2006년

● 우리나라 주민 직접 참여제도

제도	연도	근거법률
주민청구제도 ·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1999	지방자치법
주민투표제도	2004	주민투표법
주민소송제도	2006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제도	200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2018 7급 선행정학 p.840

09.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주민'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민이 갖는 권리에 해당하는 않는 것은?

- ①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답] ③ 주민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발의할 수는 없다. 주민투표는 오로지 자치단체장만이 발의할 수 있다.

- ☑ ① [X]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지방자치법 제13조)
- ② [X]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지방자치법 제15조)
- ④ [X]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지방자치법 제20조)

☞ 2018 7급 선행정학 p.845

10. 미국의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920년대와 30년대의 미국 행정학은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였다.
- ② 미국 태프트위원회에서 사용한 절약과 능률은 행정관리의 성과를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됐다.
- ③ 브라운위원회에서 제시된 능률적인 관리활동은 POSDCoRB로 집약된다.
- ④ 관리과학으로서 주류행정학은 대공황과 뉴딜(New Deal) 정책 이후에도 미국 행정학에서 지배적인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다.

[답] ④ 관리과학으로서의 고전기 주류행정학은 경제대공황과 뉴딜(New Deal)정책 이후에 정치행정일원론이 등장하면서 퇴조하였다.

- ☑ ①②③ [O]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미국행정학을 지배했던 고전기 행정관리주의는 절약과 능률에 관한 행정개혁을 강조했던 태프트위원회(1912)에서 시작되어 1937년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브라운로위원회)와 굴릭의 POSDCoRB(최고관리층의 7대 관리기능)으로 완성·집약되었다.

☞ 2018 7급 선행정학 p.4

11.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포자 모형은 정책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보다는

- 정책문제 자체의 성격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다.
- ② 이슈관심주기 모형은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별개로 이슈 자체에 생명주기가 있다고 본다.
- ③ 정책흐름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합리성과는 다른 합리성 가정을 의제설정과정의 설명에 적용한다.
- ④ 동형화 모형은 정부 간 정책전이(policy transfer)가 모방, 규범, 강압을 통해 이뤄진다고 본다.

[답] ④ Dimaggio와 Powell의 동형화(Isomorphism) 이론에 따르면 어떤 조직이든 생성 시에는 다양한 형태로 출발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동질화의 압력이 나타나 동형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정책전이현상도 일종의 정부간 동형화로 이해한다. 즉 사회적으로 정당성 또는 배태성을 인정받은 정책들을 채택한다는 것인데 동형화의 근거와 방식에는 모방, 규범, 강압 3가지가 있다. 강압적 동형화란 공식·비공식 억압에 의한 순응을 말하고, 모방적 동형화란 조직이 자발적으로 주변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며, 규범적 동형화란 전문직업사회에서의 전문화과정에 의한 동형화를 말한다.

- ☑ ① [X] 포자모형은 곰팡이의 포자가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비로소 균사체로 성장할 수 있듯이 문제 자체 성격보다는 환경을 중시하는 모형이다.
- ② [X] 이슈관심에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일반 대중은 오랜 기간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
- ③ [X] 정책흐름모형은 일반적인 합리성 모형과는 달리 쓰레기통모형 등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 정책의제 채택과정모형

정책흐름모형	쓰레기통모형 및 흐름참모형 등 조직화된 혼란상태에서의 의제설정과정을 설명
포자모형	의제설정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때 정책의 제화가 이루어진다는 모형
이슈관심주기 모형	이슈관심에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일반 대중은 오랜 기간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모형
동형화이론	정부 간 정책전이현상을 동형화로 이해
혁신확산이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확산되는 과정과 방식을 설명
사회적 구성론	의제설정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구조화행위의 연관성 속에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성

☞ 2018 7급 선행정학 p.204

12. 정책의제설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문제에 대한 통계지표의 오류는 바람직한 의제설정을 어렵게 한다.
- ② 크렌슨(Crenson)은 선출직 지도자들이 공장공해 등 전체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를 정책의제화한다고 한다.
- ③ 우리나라의 1960년대 경제제일주의는 많은 노동문제를 정부 의제로 공식 검토되지 않게 하였다.
- ④ 정치체제의 가용자원 한계는 정책의제에 대한 적극적 탐색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답] ② 크렌슨(Crenson)은 문제특성론(대기오염의 비정치화)에서 선출직 지도자들이 공장공해 등 전체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이러한 환경문제가 정책의제화하기 힘들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collective issue 즉, 전체적 문제(전체적 이

수, 전체적 편익,부분적 비용의 문제)는 정책의제화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 ☑ ① [O] 정책문제가 잘못 설정되는 3종 과오와 관련된 맞는 지문
- ③ [O] 무의사결정(의도적 무결정)의 사례로 맞는 지문. 당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인권, 노동, 복지 문제는 의도적으로 정부에 의하여 방치·기각되었다.
- ④ [O] 의제채택을 저해하는 정치적 요인으로 맞는 지문

● Crenson의 문제특성론

	집중(소수)	분산(전체)
이슈	①	②
편익	③	④
비용	⑤	⑥

246 조합의 경우가 가장 의제설정이 어려움

☞ 2018 7급 선행정학 p.203

13. 신성과주의 예산(New Performance Budgeting)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입요소 중심이 아니라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 ② 과거의 성과주의 예산과 비교하여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 ③ 책임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성과관리를 예산과 연계시킨 제도이다.
- ④ 예산집행에서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성과평가와의 연계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답] ② 신성과주의는 1990년대 결과기준 예산제도로 투입보다는 산출이나 성과를 중시하며 이를 책임성과 연관시키는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1950년대 과거의 성과주의와 구분된다. 과거의 성과주의는 예산의 형식 및 회계제도의 변경 등 개혁의 범위가 광범위한데 비해 신성과주의는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 개편 등 큰 틀의 제도개혁보다는 성과정보의 예산과정에서의 활용을 개혁의 목표로 삼는다. 이미 회계제도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가, 예산형식은 프로그램예산제도가 정착되어있었기 때문이다.

● 고전적 성과주의와 신성과주의의 차이

	1950년대 성과주의	1990년대 성과주의
성과정보	투입과 산출(능률성)	산출과 결과(효과성)
성과책임	정치적·도덕적 책임	구체적·보상적 책임
경로가정	투입은 자동적으로 성과로 이어진다는 '단선적 가정'	투입이 반드시 성과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복선적 가정'
성과관점	정부(공무원) 관점	고객(민족감) 관점
회계방식	불완전한 발생주의(사실상 현금주의)	완전한 발생주의
연계범위	예산제도에 국한, 재무적 관점	국정 전반에 연계(인사, 조직, 감사, 정책 등), BSC관점
시대	행정국가	탈행정국가
예산초점	예산의 형식	예산에 담겨질 성과정보
원가중심점	개별단위사업	프로그램(기능)

☞ 2018 7급 선행정학 p.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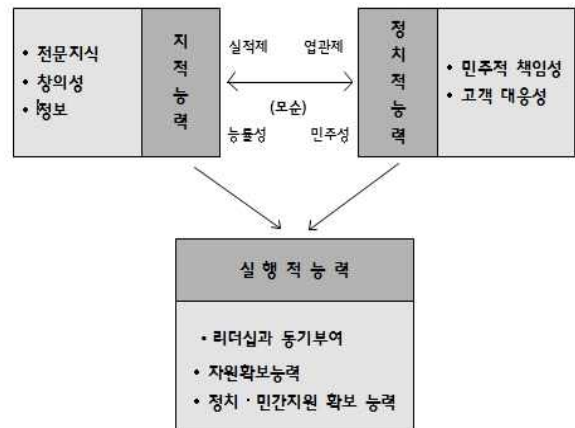
14. 행정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능력은 지적 능력, 실행적 능력을 포괄하며 정치적 능력과는 구분된다.
- ② 지적 능력은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행정학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 ③ 실행적 능력은 정치 및 민간 지원의 확보능력을 포괄한다.
- ④ 행정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능력요인들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답] ① 행정능력은 지적능력, 실행적 능력 및 정치적 능력을 포괄한다. 지적능력은 전문성, 정보 및 창의성과 관련되고 실행적 능력은 동기부여 또는 정치 및 민간지원의 확보능력을 의미하며, 정치적 능력은 민주적 또는 대고객 책임성을 의미한다.

- ☑ ② [O] 지적능력은 전문성, 정보 및 창의성과 관련되며 가장 중요한 능력요소에 해당한다.
- ③ [O] 실행적 능력은 리더십, 동기부여 및 정치 및 민간 지원의 확보능력을 포함한다.
- ④ [O] 지적능력은 능률성과 실적제와 관련되고 정치적 능력은 민주성이나 업관제와 관련되어 양자간에는 모순관계가 존재한다.

● 행정능력의 구성요소와 관계



15. 정책의 유형과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로위(Lowy)의 정책 분류는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를 통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② 알몬드와 파우얼(Almond & Powell)에 따르면 조세 및 부담금 등은 재분배정책으로 볼 수 있다.
- ③ 로위(Lowy)는 군인연금에 관한 정책을 분배정책으로 분류한다.
- ④ 로위(Lowy)의 정책 분류에 따라 정책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ization)가 용이해졌다.

[답] ① Lowi는 하나의 정치적 모형이 모든 정책을 지배할 수 없으며 정책유형별로 정책결정과정에 나타나는 정치적 특징이 달라진다고 보면서 다원론(규제정책)과 엘리트이론(재분배정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 ☑ ② [X] 알몬드와 파우얼(Almond & Powell)에 따르면 조세 및 부담금, 공무원 모집 등은 추출정책에 해당한다.
- ③ [X] 로위(Lowi)는 보수나 연금에 관한 정책을 구성정책으로 분류한다.
- ④ [X] Lowi의 분류는 구성정책이 나중에 추가되는 등 동일한 분류기준을 사용하지 않아 분류된 정책들이 상호배타적이지 못하고 정책분류에서 사용한 기본개념들의 모호함이 조작화(operationalization)를 어렵게 한다는 약점을 지닌다.

● Lowi의 정책유형

구분	개념	예	특징	주도
구성정책	행정체제 정비	정부기관 신설	개입의 법적	정당
배분정책	서비스 배분 (개별화 정책)	SOC, 보조금 등	포크배럴, 로그롤링	의회
규제정책	제약과 통제	진입규제, 독과점규제	다원주의 (포획, 지대추구)	이익 집단
재분배정책	부의 이전	사회보장정책	엘리트이론	엘리트

☞ 2018 7급 선행정학 p.193

16. 성과평가의 방법과 모형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논리모형(Logic Model)은 직무활동이 설정된 성과목표를 성취하는 과정보다는 단기적인 산출물을 중시한다.
- ㄴ. 성과표준평정법(Performance Standard Appraisal)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수준을 명시한다.
- ㄷ. 균형성과평정법(Balanced Scorecard)은 내부과정의 관점보다는 고객 관점의 평가방법이다.
- ㄹ. 행태관찰평정법(Behavioral Observation Scales)은 성과와 관련된 직무행태를 관찰하여 활동의 발생빈도를 측정한다.

- ① ㄴ,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답] ① ㄴ, ㄹ만 옳다.

- ☑ ㄱ [X] 논리모형(Logic Model)은 단기적인 산출물이나 성과보다는 직무활동이 설정된 성과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이나 인과경로를 중시한다. 산출이나 성과를 중시하는 모형은 논리모형이 아니라 목표모형이다.
- ㄴ [O] 성과표준평정법(Performance Standard Appraisal)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수준을 명시한다.
- ㄷ [X] 균형성과평정법(Balanced Scorecard)은 내부와 외부, 결과와 과정 등 다양한 관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성과를 평가하려는 방법이다.
ㄹ [O] 행태관찰평정법(Behavioral Observation Scales)은 성과와 관련된 직무행태를 관찰하여 활동의 발생빈도를 측정한다.

☞ 2018 7급 선행정학 p.459

17.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은 최협의적으로는 행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의 활동에 대한 것이다.
- ② 행정은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 분배를 통해 공공 욕구를 충족시켜 국민 삶의 질을 증대하고자 한다.
- ③ 행정의 활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 ④ 행정의 활동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가 독점한다.

[답] ④ 오늘날 행정활동은 정부가 독점하기 보다는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담당하는 협력적 통치로서의 행정을 의미한다.

☞ 2018 7급 선행정학 p.4

18. <보기>에서 예산집행의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총액계상제도 ㄴ. 이용
ㄷ. 전용 ㄹ. 이월제도
ㄴ. 계속비제도 ㄹ. 국고채무부담행위

-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ㄷ, ㄴ, ㄹ ④ ㄴ, ㄷ, ㄹ

[답] ③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기간적 한정성)에 대한 예외를 의미하므로 ㄷ, ㄴ, ㄹ이 맞다.

- ㄹ [O] 이월은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으로 기간적 한정성의 예외이다.
- ㄴ [O] 계속비제도는 완성을 하는 데 수년을 요하는 공사, 제조, 연구 개발사업을 회계연도를 초월하여 계속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이다.
- ㄹ [O]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경우 국회의 의결은 수년에 걸쳐 효력이 지속되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2018 7급 선행정학 p.605

19.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책임성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과 함께 과정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 ② 신공공관리론(NPM)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장책임성은 고 객만족에 의한 행정책임을 포함한다.
- ③ 법적 책임의 확보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 ④ 제도적 책임성은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답] ④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제도적 책임이 아니라 비제도적 책임(자율적 책임)에 해당 한다.

- ☑ ① [O] 전통적인 책임은 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이었으나 오늘 날은 과정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 ② [O] 시장책임성은 시장의 고객을 만족시켰는지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 ③ [O] 법적 책임은 시대에 따라 그 의미와 확보방법이 변하고 있다. 즉 고전기 때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충실해야 했으나 신공공관리론이 강조하는 법적 책임은 계약 (성과)에 의한 책임을 의미한다.

● 행정책임의 변천과 유형

시기	유형	주요 내용	특징과 배경
1940년대 이전 고전기	법적 책임성	의회와 관료 통제 (W.Wilson)	정치행정이론론과 관리 기술로서의 행정
	계층적 책임성	관료제적 구조에 의한 책임(M.Weber)	
1960년대 신행정학	전문가적 책임성	관료들의 문제(정의, 공익) 해결 역량	시민과 약자에 대한 전문 행정가의 역할
	정치적 책임성	시민참여	
1980년대 신공공관 리론	시장 책임성	고객과 시장에 대한 책임, 성과에 대한 책임	행정에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
	법적 책임성	계약 기반 책임	
1990년대 거버넌스	정치적 책임성	참여자간 소통과 상호학 습에 의한 책임 (파트너십)	책임성 인식과 책임주체 소멸 위기

● 제도적 책임과 자율적 책임

제도적 책임성	자율적 책임성
문책자의 외재화 또는 존재	문책자의 내재화 또는 부재
절차의 중시	절차의 준수와 책임 완수(성과)는 별개의 것 성과 중시
공식적·제도적인 통제	공식적 제도에 의해 달성 할 수 없음
판단 기준과 절차의 객관화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준 없음
제재수단의 존재(제재가능)	제재수단의 부재(제재 불가)

☞ 2018 7급 선행정학 p.322

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서울시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서울시장은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 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위 ③의 경우 서울시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답] ③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자치단체 장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행명령제도란 자 치단체 장이 국가의 위임사무 처리를 명백히 게을리 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고 행·재정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 2018 7급 선행정학 p.783

20. 지방자치단체장(서울시장)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울시장의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 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은 서울시장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이행명령